

방첩사의 반헌법적 업무복원은 12.3내란 위한 사전작업이었다.

-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선원)은 방첩사의 2022년 복원업무 12개에 이어, 추가 복원업무 22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가 해편되고 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된 것은, 단지 조직명만을 바꾸는 형식적 개편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문민통제 원칙을 실현하고, 과거 불법 사찰과 정치공작의 역사를 청산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니다.
- 그렇게 국군기무사령부와 어두웠던 과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방첩사령부는 <부대혁신TF>를 설치하고, 47개 폐지업무 가운데 12개 업무를 부활시켰습니다. 그 뒤인 2023년에는 윤석열의 12.3내란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취임하자, 과거 보안사, 기무사의 망령을 완전히 다시 불러냈습니다. 47개 업무 가운데 2022년에 복원시킨 12개 업무를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무사 시절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던 22개 업무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부활시켰던 것입니다.
- 당시 폐지되었던 업무들은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권한 남용 및 지휘권 침해 등으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임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불 원칙’이라고 정리해 폐지하였습니다.

○ 이는 단순한 개혁이 아닌 헌법적 질서 회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어제 이미 <더 공세적으로 추진해야할 복원된 업무> 12개 외에 부활하는 업무 사례 22개를 공개하겠습니다.

구)기무사 폐지업무 중 부활업무	폐지사유 (2018)
방첩 취약인물 영내 출입 확인	민간인 사찰
장성인사 이후 반향 수집 및 처리	장성 인사 개입
민간업체 신용정보 조회	이권개입 소지
대규모 재해재난 정책지원	직권남용, 민간인 사찰
민관군 갈등관리	민간인 사찰
대북관련 정책제언	정치개입
병역비리요인 발굴 및 조치	민간인 사찰
기획내사 위한 정보수집	수사권 남용
훈련장 등 민군 갈등요인 진단	민간인 사찰
예비역 단체 활동 분석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영관급 장교 대상 신원조사	영관급 인사 개입
예비역들의 대군 문제요인 발굴 및 차단	민간인 사찰
예비역 장성활동 및 정책자문 결과분석	민간인사찰, 정치개입
예비역 단체 애환 수렴 및 해소	정치개입, 민간인사찰
지역별 예비역단체 활성화 유도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예비역 대상 군 관련 정보수집 처리	정치개입, 민간인사찰
보훈정책 개선소요 도출 및 분석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전산실 출입 취약 민간인 관찰	민간인사찰, 인권침해
공사현장 보안순찰	민간인 사찰
희생장병 관련 단체 성향 분석	민간인 사찰
군사시설보호협의 참석 및 정보수집	민간인 사찰, 지휘권 침해
반미단체 및 한인노조 활동 실태 확인	민간인 사찰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간인 사찰 금지

- 우리 헌법은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군이 정보력과 물리력을 동원해 정권 유지나 특정 세력 탄압에 개입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무력화되고 군부통치의 길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보안사와 기무사가 이러한 역할을 하며 쿠데타·사찰·고문·탄압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사찰의 소지가 있고, 정치개입 우려가 있는 업무를 2018년 기무사 해편시 전면 폐지하고, 헌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한 것입니다.
- 하지만, 기무사에서 이름만 바뀐 방첩사령부에서는 반헌법적인 12.3내란에 깊숙이 개입한 여인형 사령관이 부임한 이후 폐지되었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업무가 되살아 났습니다.
- 기획내사를 위한 정보수집 업무는 기획내사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별도의 정보수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내사 대상자의 정치적 성향, 사회적 관계, 과거 활동 이력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별하여 사찰 대상으로 삼는 데 활용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사법적 절차 없이 특정 인물을 감시·관리하려는 의도로, 명백히 헌법정신에 반하는 <사전검열>이며, 군 정보기관이 민간인을 겨냥한 정치공작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는 증거입니다.
- 민간업체 신용정보 조회는 군과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기업의 재무상황이나 경영정보를 군 정보기관이 무단으로 수집·분석한 것으로,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군이 경제적 이해관계나 특정 업체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이권 개입, 보복성 감시, 입찰 배제 등을 시도할 수 있는 위험한 정보악용 구조를 의미합니다. 특히 방산업체나 국방 관련 협력업체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는 군의 권한을 앞세운 부당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정 기업 줄세우기 또는 정권 코드에 맞는 업체 선별 지원으로 악용될 우려가 큼니다.
- 대북관련 정책제언 업무는 ‘정책제언’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

정보기관이 정치·외교적 의사결정에 개입하고자 했던 시도입니다. 이는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며, 민간정부가 수행해야 할 외교·통일 정책 결정 과정에 군이 개입하려 한 중대한 문민통제 위반 사례입니다. 특히 이 업무는 방첩사 내부에서 수집한 성향 정보와 군심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정치노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북정책 방향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띠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사실상 군 정보기관의 외교정책 조종 시도이며,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위협입니다.

- **민군 갈등요인 진단 및 관리** 이 업무는 군사시설 주변 주민, 시민단체, 지자체 등과의 갈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통제하려는 목적 하에 운영된 것으로, 군이 민간사회의 여론과 정당한 요구를 '위협요소'로 취급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지 이전이나 훈련 소음, 환경오염 등 정당한 주민 민원 제기를 '갈등요인'으로 규정하고, 이를 방첩정보 수집 대상으로 삼아 주민단체, 시민단체, 언론 활동까지 감시·보고하는 구조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 이는 군이 '보안'을 명분으로 민간사회의 정치적·사회적 활동에 개입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자치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민간인 사찰 행위입니다. 특히 이 업무는 국방부나 지자체의 협업과 조정으로 해결해야 할 갈등 상황을 군 정보기관이 '심리전' 대상처럼 접근하면서, 민간과의 신뢰를 훼손하고 군에 대한 반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역효과적 조치입니다.
- 이러한 활동들은 “정책제언”이라거나, “활성화 유도” 등으로 포장했지만, 실제 내용은 군 정보기관이 정치와 민간에 개입하는 기능의 회복입니다.

군 내부 사찰 및 출신·지역 성향 분석

- 우리 국민 누구도 법령상 제한이 없는 한 출신지와 정치성향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감시당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군인은 출신지역, 출신학교, 학연, 정치성향 등으로 분류된다면 군 조직 내부가 '줄서기군대'로 변질 될 수 밖에 없고, 결국 파벌형성과 사조직

운영, 정치권력과 결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정보기관이 인사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별도의 감시체계가 가동되거나, 보고라인을 우회하게 되어 정상적인 지휘체계가 무력화 됩니다. 결국 지휘관이 아닌 정보기관이 부대를 통제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하게 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첩사는 소위 세평 등 자료제공에 그쳐야할 보조적, 참고 기능을 넘어서 인사배제 명단을 작성하고 진급 검토에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실질적으로 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 **장성급 이후 반향 수집 및 처리**는 장성인사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한다는 것으로 인사개입에 해당합니다. 이 업무는 장성급 장교가 보직 해임되거나 전역한 이후, 그 장교에 대한 내부 여론, 언론 반응, 정치적·사회적 활동 등을 수집·관리하는 행위입니다. 군내부에서 성향을 검증하고, 줄세우기를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 **영관급 장교 대상 신원조사** 역시 장성급 진급자에 대한 세평수집 등의 임무를 영관급 장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 더 심각한 것은 감찰실 산하 신원보안과가 담당하고 있는 방첩 취약인물의 영내 출입 확인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표면상 부대 출입자 통제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위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군 장병과 민간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존안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방첩사에 방첩사 인원을 빼고, 누가, 얼마나 출입하겠습니까?
- **방첩 취약인물 영내 출입 확인** 업무는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방첩에 취약인물이 누구인지를 식별하고, 기록으로 유지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군장병과 민간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심지어 방첩사 내부 인원에게조차 사상검증과 내부자 성향 식별작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 업무는 2018년 기무사 해편 당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법사찰 우려로 폐지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사라인인 박OO대령, 이OO중령 등이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설득하고, 맹OO대령이 무단으로 되살려 방첩사 내부인원조차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성향을 분류하고, 통제하는 기능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 시민사회단체, 예비역 단체 사찰 업무 역시 노골적으로 시민단체와 노조, 예비역 단체 등을 대상으로 비군사적 일상동향을 수집하고, 성향을 분류하며, 활동을 감시하는 불법적인 정보수집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반미단체 및 한인노조 활동 실태 파악 업무 역시 방첩사가 수행해서는 안될 민간인 사찰에 해당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노동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민간인 사찰 행위입니다. 도대체 노조 활동이나 예비역 단체의 비판적 목소리를 왜 군 정보기관이 감시해야 합니까?
- 또 희생장병 관련 단체 성향 분석 업무 역시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위협 요소'로 규정하고, 비판 여론을 억제하려는 명백한 정치공작 행위입니다. 이것이 군이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 지역별 예비역단체 활성화 유도 및 예비역 단체 활동분석 등의 업무는 정권 친화적인 단체를 선별해 지원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시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2000년 초반부터 2010년까지 기무사가 반핵 반김을 매개로 군기관을 집회에 동원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민간활동에 관여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기타 민간인 사찰 활동

- 이외에 대규모 재해재난 정책지원, 기획내사를 위한 정보수집, 공사현장 보안순찰, 군사 시설보호협의회 참석 및 정보수집, 보훈정책 개선소요 도출 및 분석, 민간인이 된 예비역을 대상으로 군 관련 정보수집 등의 업무들도 모두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방첩사 본연의 군사적 방첩임무와는 전혀 무관한 일상적 민간영역까지 감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군 정보기관이 사실상 <국가정보원>과 <치안정보기관> 역할까지 넘보며, 헌법상 권력분립과 문민통제 원칙을 명백히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윤석열 정권 하에서 방첩사령부가 수행한 업무들은 단순한 기능 복원이 아닙니다. 이는 군이 다시 정치공작, 사상검열, 민간 감시를 통해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즉, 12.3 내란을 위한 사전작업이었습니다.

○ ‘도로 보안사’로 돌아간 군 정보기관은 이미 정치적 반대세력을 감시하고, 내부 군 장병을 성향별로 분류하며, 정권에 불리한 자들을 배제할 수 있는 사찰기능을 회복한 것입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방첩사령부의 모든 불법적 정보수집·정치개입 업무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경민 방첩사령부 직무대행을 즉각 직무배제 하십시오.
- 감찰실 신원보안과의 존안 관리 실태를 전면 감사하고, 불법 존안 파일을 즉시 폐기하십시오. 이를 이용해 누군가를 협박하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 두십시오.
-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문민통제’를 복원할 것입니다
- 이재명 정부는 군을 다시 국민의 군대로 되돌릴 것입니다.
- 기무사 해체의 정신, 문민통제 원칙, 정치로부터의 독립이라는 헌법정신은 결코 후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업입니다.
- 군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방첩사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방치한다면, 민주주의는 다시 총칼 뒤의 그림자 정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끝